http://dx.doi.org/10.5392/JKCA.2016.16.09.022

통일세 수용의 선행 요인과 메시지 유형별 설득 효과에 대한 연구

Determinants of the Unification Tax Acceptance and Persuasion Strategy

김해영, 신명환
고려대학교 언론학과

Haeyoung Kim(1774young@naver.com), Myoung-Hwan Shin(shin_comm@naver.com)

요약

대한민국의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통일 재원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찬반논의가 집중되는 통일 재원 확보 방안인 통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조세제도 및 통일에 대한 사전태도, 지식수준이 통일세 납부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했다. 또한 전망이론을 적용해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상이한 설득 메시지를 제공하고, 태도 변화 정도를 확인했다. 연구결과, 남성, 고연령, 고소득 집단에서 통일 및 통일세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남북통일과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과 세금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에서는 태도 변화의 손실을 축소한 메시지가 이익을 강조한 메시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통일세 | 통일 비용 | 전망이론 | 조세저항 |

Abstract

How to obtain the financial resources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although the unification of Korea incurs enormous cost. This study explains what tax payers of Korea think with regard to the unification tax which is a contradictory issue as a financial resource. The authors analyzed demographic factors, an initial attitude to unification and tax system, and the degree of knowledge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ay the unification tax. Furthermore, through the prospect theory, the authors found out how the attitudes of tax payers change by providing them with different messages according to whether they support or oppose the unification tax. The results showed that a group who are male, a group who are old, and a group with high income tend to support the unification and the unification tax more than others. And the results presents that a group who has more interests in both the unification and the unification tax and a group who has more knowledge about the unification and the tax system have more willingness to pay the unification tax than others.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persuasive effect of distinct message types, a message which conceals the cost of attitude change was demonstrated to be more effective than a message which emphasizes the benefit.

■ keyword : | Unification Tax | Unification Cost | Prospect Theory | Tax Resistance |

접수일자 : 2016년 07월 22일
수정일자 : 2016년 08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8월 24일
교신저자 : 신명환, e-mail : shin_comm@naver.com

Ⅰ. 서론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의 당위적 과제이다. 남한과 북한 국민의 대다수가 전통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적시해, 남북통일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임을 천명했다. 역대 정부도 헌법 이념에 기초해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언급하며 통일의 가치와 긍정적 전망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 정책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부의 통일 방안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전략의 부재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변화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5년 10월 여론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80.4%, 20대의 71.5% 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향후 정책은 일방적으로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통일 방법론과 성과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통일의 비용 문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남북통일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 당위론적 지지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장된 대표적인 통일 비용의 확보 방식이 세금 형식의 재원 마련, 곧 ‘통일세’이다. 통일세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다가온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구체화됐다. 이후 여당 및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찬성 측에서는 통일세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 제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야당 및 진보언론으로 대표되는 반대 진영에서는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1].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어려운 남북통일과 달리, 조세 제도로서 특성을 가진 통일세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관련 여론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2.6%가 추가적인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반면, 38.7%는 부담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통일세 신설에 찬성하는 반면 33.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방식이 검토되지 못한 채, 통일세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만 무성한 상황이다.

물론 최근 들어 통일세의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논의[2]나, 통일세에 대한 인식 전반[3], 수용자의 성격에 따른 조세저항 정도[4]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설득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세에 대한 수용자의 찬반 의사와 이에 영향을 주는 사전 요인을 살펴보는 한편, 찬반 입장에 따른 설득 메시지의 유형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본 연구는 설득 메시지를 통한 의견 전환 가능성을 살펴본다. 국민의 통일 비용 부담의사나 통일세에 대한 찬반 태도의 파악에 주력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메시지에 따른 의견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자의 입장에서 관련된 설득 자극물을 제공하는 실험적 설계를 통해 응답자의 의견 전환 정도를 측정한다. 통일 관련 사안이자 조세 제도로서 통일세 이슈가 가진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해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통일 전반에 대한 지식과 세금 문제에 대한 지식, 이슈 관여도 등이 통일세에 대한 찬반 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설득 자극물 유형에 따른 의견 전환 정도를 측정해, 보다 효과적인 설득 전략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정책의사결정사

안에 있어 여론의 변화가능성을 타진하고, 수용자의 사전 입장에 입각한 설득 전략을 확인하고자 한다. 통일세 등 정책 도입에 앞서 국민의 기초적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통일세 도입의 근거와 수용자의 인식 연구

통일의 비용과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통일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201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연구들이 통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한정했다면, 통일세 이슈가 부각된 시점부터는 통일의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과거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제한적이나마 통일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해왔다. 특히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통일 비용과 사회통합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북통일의 경제적인 효과를 추산한 연구가 다수 등장했다. 그러나 추정 통일 비용은 통일 시점이나 통일 형태, 추산 방식 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추정 방식은 남북한의 1인당 평균소득(GDP) 등이 동등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 총액을 산출하는 '목표치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일관된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강조해,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수준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간 약 2조 유로(3,000조원)의 통일 비용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1991년부터 '통일연대부가금'이라는 명칭 하에 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5.5% 수준의 통일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통일연대부가금 부과 사례는 국내 통일세 도입의 주요 논거로 활용된다. 통일 전 동·서독에 비해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현재 유일한 통일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통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통일 시점에서 동·서독의 경제력 차이의 3배 이상으로 추산되는 까닭에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비용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5]. 사회경제적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독일 통일 이후 공감대를 얻어왔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의 사례는 국공채발행, 조세징수, 정부의 재정정책, 협력사업, 해외자본 차입, 개발은행 설립 등 다양한 통일 재원의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 가운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직접적인 조세의 징수 곧, 통일세이다. 그러나 통일세는 납세자들의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독일 납세자연맹은 2006년 연방헌법재판소에 통일세의 위헌소송을 제기,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나 내역 없이 통일연대부가금을 거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통일연대부가금은 한시적인 조치"라는 판결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쾰른 및 뮌스터 금융법원이 통일연대부가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독일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6].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통일세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통일세 도입

표 1. 과거 분석을 통해 추산된 통일 비용

연구기관(년도)	비용(억 달러)	주요가정	개념
KDI(1991)	3,121	2,000년 통일 달성	목표치 접근방식
삼성경제연구소(2005)	546	2,015년 통일 달성	항목별 추정방식
Rand Corporation(2005)	500~6,670	-	목표치 접근방식
한국은행(2007)	5,000~9,000	-	목표치 접근방식
금융위원회(2014)	5,000	통일 이후 20년간	목표치 접근방식
국회 예산정책처(2015)	21,000~48,300	통일 이후 50년간	목표치 접근방식

자료 출처: 박성진, 선은정, "통일세와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2011)" 등을 수정, 재인용

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우선 통일세의 제도적 타당성과 선결 조건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조세부담 및 통일비용의 추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일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제도의 선결과제로 강조했다[5]. 또한 간접세와 직접세, 일괄세 등 통일세 부과 방식에 따른 장단점과 파급효과를 분류하고, 조세제도가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7]. 한편 통일세를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해 제도 도입의 선결 과제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있다. 통일세 제안의 배경을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북한에 대한 압박', '통일 재원 확보를 통한 미래대비' 등으로 분석한 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1][8].

최근 들어 통일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도 등장한다. 정책 도입이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권자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이나 소득 수준 등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대부분 통일세에 대한 찬반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9]. 그러나 표본에서 대학생을 제외한 일부 분석에서는 성별이 통일 및 통일세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따라서 조세 이슈의 특성 상 조사 대상을 납세자로 한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 패널 자료를 활용해 교육수준이 높고, 공적연금 납부액이 많은 납세자일수록 통일세 추가부담 의사가 높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도 있다[4]. 주관적인 세 부담 정도가 크다고 느낄수록 추가적인 납세를 거부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납세자의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 조세의 수평적 공정성 인식과 같은 사전 태도가 세금 부담 의사를 결정하는 주요 인으로 확인됐다.

통일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통일세의 수용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제안한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특히 관련된 설득 메시지가 제공되었을 때 태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연구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실험설계를 통해 상이한 유형의 설득 메시지가 어떠한 태도 변화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2. 조세저항과 태도 형성 요인에 대한 연구

남북통일은 헌법 등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가?"가 통일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된다. 과거 통일세 관련 발언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포함한 남한 정부 주도의 통일" 곧, '흡수통일'과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되어왔다. 대북협력사업과 민간 교류의 확대 등 남북 관계의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세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은 흡수통일을 시도하겠다는 대내외적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까닭에 통일세 이슈를 부각시키는 발언이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 관계의 단절이나 냉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력한 통일 재원의 확보 방안인 통일세가 오히려 통일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정책 효과가 아닌 기존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통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결정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통일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찬성 의견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은 모두 통일세를 포함한 통일 비용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통일세에 대한 사전적 의견과 함께 수용자들의 저항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통일세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와 같은 국민 인식에 기초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익 인식을 조사한 결과,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10]. '전쟁경험 세대' 즉, 60대 이상과 2, 30대로 구성된 '민주주의 세대'간의 인식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물론, 통일세에 대한 찬반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일의 중요성 인식'이나 '통일 관련 지식' 등 변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세 제도로서 통일세가

보다 개인적인 차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납세 이슈는 개인의 수입이나 경제적인 효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과 같이 국가주의적 당위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조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세금을 거부하거나 반발하는 조세저항은 조세제도의 성립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재정학 및 세무학 분야에서 납세자의 만족도나 조세저항 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국가 별 문화 차이와 직무 관련 태도를 조사한 Hofstede의 분석[11]을 적용해 국가별 조세순응수준을 비교 조사한 연구가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경제적 자유의 수준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이 높고, 경쟁 법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인식할수록 조세저항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12]. 국내에서도 납세 행동과 사회적 공정성 인식, 개인의 심리적 태도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납세태도나 사회의 공정성 인식이 조세저항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세금 관련 서비스나 정책의 투명성 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조세저항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4], 공인중개사 등 특정 계층의 납세 인식과 납세 태도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조세공평성' 등 사회적 인식이 납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15]. 한편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납세 의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조세 윤리 의식과 같은 태도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16].

이와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통일세 납부 의사나 향후 정책 도입 시 납세 행동에는 연령과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통일 및 통일세, 조세 제도 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된다. 결국 통일세가 향후 구체적인 조세 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납세자의 의사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차원적인 변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세 도입에 앞서 국민의 찬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망이론과 메시지 유형별 설득 요인에 대한 연구

통일 비용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남북통일 및 조세 제도와 연관된 복합적 이슈로서 사회적 중요성이 크다. 정책 시행 시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통일세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정책 사안에 불과하다. 대통령 등 정치인의 발언에 여러 차례 등장할 때마다 논의만 분분했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시행 시기 등 방법론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용의 확보 방안은 향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현실적인 문제로서 다차원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정책 결정의 교환관계(trade-off)를 가진 이슈에서 중요한 판단준거는 결국 국민의 의사이다. 새로운 정책 도입의 효과는 사후적으로만 정치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가장 보편적인 대안이 된다. 통일세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최종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세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 내용의 공유가 국민적 동의의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 제공된 판단준거가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수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민주주의적 절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적 결과가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까닭에 민주주의적 여론 수렴 과정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기인한 비합리적 선택의 가능성을 검토해야만 한다. 통일세 이슈에 대해 국민은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책 효과나 관련한 대안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상황 등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이 급속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 과정을 탐색한 기존 연구에 따

르면, 사람들은 종종 본인의 효용 극대화라는 일반적인 준거에 위배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견된다[17]. 그런데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와 같은 선택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함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다. 그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정립한 것이 곧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다[18].

전망이론에 따르면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에 따라 획득되는 기대 효용(expected utility)은 항상 감소하며,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인간의 위험회피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감정적 요인 등에 의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함수는 세 가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18].

첫째, 개인의 준거점(reference point)에 의존해 이익과 손실 개념이 형성된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는 준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익과 손실의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 준거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 사람이 투자를 통해 동일한 비율의 수익 혹은 손실을 얻더라도, 초기 투자 금액이나 기초 자산의 차이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 가치함수는 민감도 체감성(diminishing sensitivity)을 가진다. 개인의 가치함수는 이익과 손실 구간에서 모두 한계효용곡선(marginal utility curve)과 같은 형태로 체감한다. 즉, 이익 또는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주식 투자 등에서 이익 혹은 손실의 값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커지면 최초 이익 혹은 손실의 발생 시점보다 둔감해 진다.

마지막으로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을 가진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익과 손실이 동일한 확률을 가진 게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들은 손실이 이익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19][20]. 행동으로 인한 손실과 이익의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최소 기대 손실의 두 배 이상 기대 이익이 보장될 때만 행동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이론의 근거를 적용하면 결국 수용자는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준거점을 설정하게 되며, 이익과 손실의 판단에 따라 상이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론은 금융 및 행동경제학, 정치학, 언론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테러나 전쟁, 영토분쟁 등 위기 관리 방식을 논의하거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행위 등을 분석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또한 메시지의 유형과 사전 요인에 따른 설득효과의 차이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

특히 메시지의 프레이밍(framing) 효과를 측정하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들이 주목된다.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손실 유형의 메시지가 이익 유형의 메시지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검증한다[21-23]. 또한 관련 분석들은 질병의 검진에서는 손실 프레이밍이, 예방 영역에서 이익 프레이밍이 효과적이라는 의견[24]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불확실한 프레이밍보다는 확실한 프레이밍을 선호한다고 가정[25]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 효과에 주목했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보다 강력한 선유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인 메시지의 프레이밍과 설득 효과를 분석한 실험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나 광고에서 프레이밍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연구가 전망이론의 가설을 일반적으로 적용해 검증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친다[26-28]. 메시지 프레이밍 유형은 물론 수용자 사전적 태도나 특성 요인이 메시지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29]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가진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 전망이론의 변용을 시도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는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에서 수용자의 태도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까닭에 설득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한 정책 혹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존의 정치적 태도와 지식수준 등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일세 사안에 전망이론을 적용해 탐색적인 수준이나마 메시지 유형별 설득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

일세라는 새로운 정책 이슈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수용자의 사전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 메시지를 통한 태도 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설득 메시지 유형에 따른 의사 전환 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도입 시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통일세에 대한 찬반 입장 및 이와 관련한 행동 변수로서 통일세 납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다. 따라서 응답자의 선유경향(orientation)이나 연관 지식이 통일에 대한 찬반입장과 통일세 납부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나아가 응답자의 찬반 태도를 사전 분류한 후 찬성과 반대 집단에 각각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의 설득 메시지를 제공해, 메시지 유형별 설득 효과의 차이를 비교할 방침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소득차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 정도 및 통일세 납부 의사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_1.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소득)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_2.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소득)에 따라 통일세 납부 의사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개인의 선유경향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 정도 및 통일세 납부 의사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_1.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개인의 선유경향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_2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개인의 선유경향에 따라 통일세 납부 의사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 정도 및 통일세 납부 의사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_1.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_2.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통일세 납부 의사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4. 통일세에 대한 사전 태도를 가진 피 실험자에게 제공된 설득 메시지 유형(이익메시지, 손실메시지)에 따라 태도의 변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는가?

연구문제 4_1. 통일세에 찬성하는 피실험자들은 제공된 설득 메시지 유형(이익메시지, 손실메시지)에 따라 태도의 변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_2. 통일세에 반대하는 피실험자들은 제공된 설득 메시지 유형(이익메시지, 손실메시지)에 따라 태도의 변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2. 연구 방법

2.1 실험 설계 및 자료 수집, 분석 방법

분석을 위해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 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태도에 따라 상이한 설득 메시지를 제공하는 실험적 구조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 측정과 이에 따른 설득 메시지 제공, 사후 측정이라는 복합적인 설계를 감안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온라

인 조사의 특성상 표본의 편향성이나 응답의 누락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2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 실험 및 수집 자료의 사후 검토를 통해 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온라인 조사가 표집의 용이성을 높이고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본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선정한 20대부터 50대까지 납세자 표본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통일세에 대한 찬반 입장과 두 가지 자극물 유형에 따라 2×2 요인 설계방안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동시에 진행했다. 즉, 사전에 통일세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사한 후 찬성과 반대 집단에게 각각 무작위로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의 자극물 중 하나를 제공해 설득효과를 파악했다. 조사는 제공되는 설득 메시지(자극물)를 중심으로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로 구성된다. 사전 조사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 의사, 통일세 납부 의사, 이슈 관심 정도, 세금 민감도 등의 문항을 제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했다. 아울러 남북통일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 정도를 주관식 및 객관식 문항으로 측정했다. 그 후 통일세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각각 태도변화에 따른 '손실 메시지'와 '이익 메시지'를 무작위로 제공한다. 사후 조사에서는 통일세에 대한 찬반 입장 및 태도변화의 정도를 다시 측정했다.

조사 표본은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및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 수를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선정되었다. 조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살펴보면, 남성 108명(46.6%), 여성 124명(53,4%)로 구성되었고, 연령대는 20대 8명(3.4%), 30대 81명(34.9), 40대 79명(34.1%), 50대 이상 64명(27.6%)으로 구성됐다. 응답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30대와 40대에 집중되는데, 실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감안한 층화 표집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조사에서는 이를 감안한 보다 정교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23명(9.9%), 200만원~400만원 미만 81명(34.9%), 400만원~600만원 미만 79명(34.1%), 600만원 이상 64명(27.6%)로 분포되었다. 소득 항목의 경우 실제 경제활동 인원 수 및 가족 구성원 수를 감안해 1인당 소득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소득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기기입식 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가계 소득으로 대체했다. 향후 통일세의 부과방식이 구체화되면 1인당 소득 수준이나 가계 구성원 수 등 보다 다양한 변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소득차이)에 따라 통일 지지도 및 통일세 납부 의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또한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개인의 선유경향과 지식 정도에 따른 통일 지지도 및 통일세 납부 의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 회귀분석(multi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통일의 찬성 및 반대 의사를 가진 피실험자 집단의 메시지 조작물 유형(이익메시지, 손실메시지)에 따른 태도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복측정 변량분석(RM-ANOVA)을 사용하여 메시지 노출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은 SPSS WIN 18.0을 통해 이루어졌다.

2.2 주요 변인의 측정방법

①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개인의 선유경향

메시지의 효과는 개인의 사전적인 태도 곧 선유경향(orientation)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의 선유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해 '관심이 많다.', '잘 알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3개의 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선유경향에 관련한 문항 간 신뢰도를 측정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값은 남북통일 = .892, 통일세 = ,841. 세금민감도= .729로 나타났다.

②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의 수준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묻는 주관식 및 객관식 총 10개의 질문을 활용했다. 남북통일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는 “다양한 통일 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앙행정기구는 무엇입니까?”,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복원이 시작되었다가, 최근 착공 10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된 철도노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통일세에 대한 지식수준을 묻는 질문 항목으로는 “2016년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연구에서 제시한 남북통일의 최소 비용은 얼마입니까?”, “최초 통일세를 제안하고 공론화한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지식 정도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간접세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의 설문 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분석을 위해 각 영역별 문항을 채점, 합산 평균 점수를 통해, 남북통일과 세금 관련 지식수준을 분류하였다. 물론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응답자에게 보다 다양한 문항을 제공하고, 문항 간 요인 분석을 통해 지식수준 측정에 적합한 문항들을 추출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문항의 난이도 등 요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외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과 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각각 세금과 통일 관련 지식과 관련된다고 설정한 문항 전체의 평균 점수를 활용했다.

③ 설득 메시지 유형(이익메시지, 손실메시지)

본 연구는 사전·사후 조사로 구성된 실험적 설계를 통해 메시지의 유형 별 설득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단에게는 각각 50%의 확률로 ‘이익메시지’ 혹은 ‘손실메시지’가 제공된다. 두 가지 메시지는 찬반 입장 외 조사 참여자의 사전 태도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제공되었다. 이때 ‘이익메시지’란 태도 변화에 수반되는 이익을 강조하는 메시지이다. 반면 ‘손실메시지’란 통일세에 대한 태도변화에 수반되는 손실을 최소화한 메시지이다. 즉,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지만, 이익과 손실 가운데 강조하는 측면이 상이하다. 예컨대 통일세에 반대하는 집단에게 제공되는 이익메시지는 “통일세를 도입할 경우 납부액의 2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예상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면 통일세에 반대하는 집단에게 제공되는 손실메시지는 “통일세를 도입해도 납부액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2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통일세에 찬성하는 집단에게는 “통일세를 도입할 경우 실 납부액이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2배에 달한다.”는 ‘손실메시지’와 “통일세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 납부액의 2분의 1에 그친다.”는 ‘이익메시지’가 무작위로 제공됐다.

“사람들이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다.”는 일반적인 전망이론의 가정을 적용할 경우, 손실메시지에 노출된 응답자가 이익메시지에 노출된 응답자보다 태도 변화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이슈의 특성을 감안해 연구가설이 아닌 연구문제로 이를 확인코자 했다. 정치적인 사안에서 의견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 정도에 따라 준거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전망이론을 적용한 탐색적인 연구의 성격을 감안해, 연구자들은 응답자의 사전 태도를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의 준거점을 결정한 후 각 메시지의 효과를 비교할 방침이다.

표 2. 사전적인 찬반 입장에 따른 이익, 손실메시지 유형과 응답자 수

구분	찬성반대의사*이익/손실메시지	빈도	퍼센트
메시지 유형	찬성의사*이익메시지	40	17.2
	찬성의사*손실메시지	47	20.3
	반대의사*이익메시지	69	29.7
	반대의사*손실메시지	76	32.8
합계		232	100

Ⅳ.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가계소득)에 따라 통일 지지 정도와 통일세 납부 의사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3]은 성별, 연령, 가계소득에 따른 통일 지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통일지지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F=15.507$, $df=1$, $p<0.05$), 연령대와 가게 수입에 따른 통일 지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통일 지지도의 경우 남자(평균=5.35)가 여자(평균=4.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 반면,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태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소득차이)에 따라 통일세 납부 의사는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통일세 납부 의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에 따르면, 성별, 연령, 소득의 차이에 따라 통일세 납부 의사가 달리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통일세 납부 의사는($F=12.529$, $df=1$, $p<0.05$), 남자(평균=3.89)가 여자(평균=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에 따른 통일세 납부 의사의 차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0대(평균=2.50)가 가장 낮은 통일세 납부 의사를 보인 반면, 50대(평균=3.89)가 가장 높은 납부 의사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세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847$, $df=3$, $p<0.05$). 그리고 가계 소득에 따른 통일세 납부 의사($F=3.241$, $df=3$, $p<0.05$)도 차이를 보였다. 200만원 미만의 가계 소득 수준을 갖는 응답자(평균=2.91)가 가장 낮은 통일세 납부 의사를 보였으며, 600만원 이상의 가계소득을 갖는 응답자(평균=4.26)가 가장 높은 통일세 납부 의사를 보였다. 연령과 가계소득에 따른 통일세 납부 의사의 차이를 Tukey B 사후 분석한 결과 연령은 20대와 50대가 집단 간 차이를 보이며,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 집단과 600만원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인구통계학적 변인, 특히 성별 및 소득에 따른 통일지지 및 통일세 납부의사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학생 등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존 연구와 달리, 조세 이슈에 민감한 실제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데 기인한 결과로 추론된다. 한편, 이는 소득 수준이나 납세액과 조세저항 정도가 관련성을 가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2의 확인을 위해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개인의 선유경향(관심도, 자기평가 지식, 중요성 인식)에 따라 통일 지지 의사와 통일세 납부 의사가 달리 나타나는 지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살펴보았다. 남북통일과 세금민감도는 .445, 남북통일과 통일세는 .796, 통일세와 세금민감

표 3.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통일 지지 정도의 차이

집단		n	M	SD	F	df	P	n^2
성별	남자	108	5.35	1.79	15.507	1	.000	,063
	여자	124	4.40	1.86				
연령	20대	8	4.13	1.64	2.249	3	.083	.029
	30대	81	4.48	1.90				
	40대	79	5.06	1.93				
	50대	64	5.13	1.76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23	4.13	1.91	2.550	3	.056	.032
	200만원 ~ 400만원 미만	84	4.76	1.88				
	400만원 ~ 600만원 미만	90	4.86	1.84				
	600만원 이상	35	5.49	1.85				

표 4.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통일세 납부 의사 차이

집단		n	M	SD	F	df	P	n^2
성별	남자	108	3.89	1.945	12.529	1	.000	.052
	여자	124	3.06	1.602				
연령	20대[a]	8	2.50	1.414	3.847	3	.010	.048
	30대[ab]	81	3.02	1.775				
	40대[ab]	79	3.62	1.749				
	50대[b]	64	3.89	1.861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a]	23	2.91	1.881	3.241	3	.023	.041
	200만원~ 400만원 미만[ab]	84	3.38	1.810				
	400만원~600만원 미만[ab]	90	3.33	1.663				
	600만원 이상[b]	35	4.26	1.975				

위첨자 [a] [b]는 Tukey B 사후검증을 통한 동일 집단 군

표 5.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통일 찬성의사의 다중회귀분석

선유경향	β	t	유의확률	자유도	F	유의 확률	R^2	다중공선성 진단	
								공차	VIF
남북통일	.691	8.731	.000	3,228	72.591	.000	.482	.358	2.796
통일세	.036	.449	.654					,355	2.818
세금 민감도	−.051	−.940	.348					.776	1.288

도는 .452로 나타났다. 이후 다중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본 바 결과 VIF값이 10이하, 공차한계가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유경향이 통일 지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표 5]의 결과, 개인의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 가운데 남북통일에 대한 선유경향이 통일의 지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72.591 df=3,228, p<0.05). 다중 회귀분석 후 다시 개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남북통일에 대한 선유경향은 통일 찬성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8.731 p<0.05). 그러나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선유경향은 통일 찬성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남북통일에 대한 선유경향이 강한 사람 즉,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고, 스스로 남북통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남북통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통일에 강한 찬성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691).

이어서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개인의 선유경향(관심도, 자기평가 지식, 중요성 인식)에 따라 통일세 납부 의사가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분석결과, 개인의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선유경향 중 남북통일, 통일세에 대한 선유경향이 통일세 납부 의사에

표 6.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민감도에 대한 통일세 납부 의사의 다중회귀분석

선유경향	β	t	유의확률	자유도	F	유의 확률	R^2	다중공선성 진단	
								공차	VIF
남북통일	.253	2.740	.007	3,228	33.143	.000	.304	.358	2.796
통일세	.374	4.033	.000					.355	2.818
세금민감도	−.114	−1.820	.070					.776	1.288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33.143 df=3,228, p<0.05). 개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남북통일 선유경향(t=2.740 p<0.05)과 통일세 선유경향((t=4.033 p<0.05)은 통일세 납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민감도에 대한 선유경향은 통일세 납부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남북통일에 대한 선유경향이 강한 사람 즉,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이 크고, 스스로 남북통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남북통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β=.253), 마찬가지로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세의 중요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β=.374)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고 통일 찬성 의사가 높을수록 통일세 납부의사가 크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향후 통일세 등 통일비용 마련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통일 비용에 대한 교육과 인지도 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3. 연구문제 3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개인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통일 찬성 의사가 달리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 변인 간 상관관계 살펴보았다. 남북통일과 세금은 .472, 남북통일과 통일세는 .405, 통일세와 세금은 .348로 나타났다. 이후 다중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본 바 VIF 값이 10이하, 공차한계가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 중 남북통일, 세금에 대한 지식이 통일의 찬성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9.383, df=3,228, p<0.05). 개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남북통일 지식은 통일 찬성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40, p<0.05). 또한 세금지식도 통일 찬성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72, p<0.05). 그러나 통일세에 대한 지식은 통일 찬성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에 대한 지식이 통일 찬성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북통일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북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5). 또한 세금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9).

이어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개인의 지식의 정도에 따라 통일세 납부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의 분석 결과 개인의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 중 남북통일, 세금에 대한 지식이 통일세 납부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7.478, df=3,228,

표 7.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개인의 지식의 정도에 따른 통일 찬성의사의 다중회귀분석

지식	β	t	유의확률	자유도	F	유의확률	R^2	다중공선성 진단	
								공차	VIF
남북통일	.225	3.040	.003	3,228	9.383	.000	.110	.711	1.407
통일세	−.041	−.583	.561					.804	1.243
세금	.179	2.472	.014					.747	1.338

표 8. 남북통일, 통일세, 세금에 대한 지식의 정도에 따른 통일세 납부 의사의 다중회귀분석

지식	β	t	유의확률	자유도	F	유의확률	R^2	다중공선성 진단	
								공차	VIF
남북통일	.241	3.220	.001	3,228	7.478	.000	.090	.711	1.407
통일세	−.054	−.764	.446					.804	1.243
세금	.124	1.695	.091					.747	1.338

p<0.05). 개별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남북통일 지식은 통일세 납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220, p<0.05). 그리고 세금에 대한 지식은 통일세 납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695, p<0.05). 그러나 통일세에 대한 지식은 통일세 납부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통일 지식수준이 통일세 납부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북통일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β=.241), 또한 세금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124).

특히 세금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통일세 납부 의사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인식이 조세저항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금 지식과 조세저항 정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의 제고가 조세저항의 완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데, 이는 조세 저항의 상당 부분이 정책의 불투명성이나, 사회적인 조세 교육의 부재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4. 연구문제 4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 4에서는 통일세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집단에서 각각 상이한 유형의 메시지가 어떠한 설득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먼저 통일세 찬성 집단에서 메시지 조작물 유형(이익메시지, 손실메시지)에 따른 태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전제로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mauchly's W 값, 엡실런 값, Greenhouse-Geisser 수치 등이 모두 이상치인 1을 기록한 바 구형성 가정은 충족되었다. [표 9]은 이익메시지와 손실메시지 제공에 따른 사전 사후 태도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사전적으로 통일세에 대한 찬성 태도를 가진 사람 중 이익메시지에 노출된 응답자의 사전 평균 값은 5.43으로 나타났으며, 메시지 노출 이후 사후 평균값은 5.08로 소폭 감소(0.35)하였다. 그리고 통일세에 대한 찬성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 손실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의 사전 태도 평균값은 5.40으로 나타났으며, 메시지 노출 이후 4.53으로 감소(0.87)하였다. 즉 두 집단 모두 메시지 노출 후 통일세에 대한 찬성 정도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나, 설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통일세에 대한 찬성의사를 가진 응답자들은 이익메시지 보다는 손실메시지에 더욱 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은 메시지 노출이전과 이후의 태도변화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형성 가정에 제시된 수치 상 노출전후와 메시지유형의 설명변량 2.948, 오차변량 .0555, F값 5.312이고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익메시지와 손실메시지라는 노출된 메시지 유형에 따라 태도의 변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익메시지

표 9. 찬성 집단의 사전 · 사후 통일세 납부 의사 평균값

	이익·손실메시지	평균	표준편차	N
찬성 (메시지노출이전)	이익	5.43	.781	40
	손실	5.40	.771	47
	합계	5.41	.771	87
찬성 (메시지노출이후)	이익	5.08	.971	40
	손실	4.53	1.544	47
	합계	4.78	1.333	87

표 10. 유의도 검증 결과

	변량	자유도	F	유의확률	부분에타 제곱
노출전후*메시지	2.948	1	5.312	.024	.059
오차	.555	85			

와 손실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태도의 변화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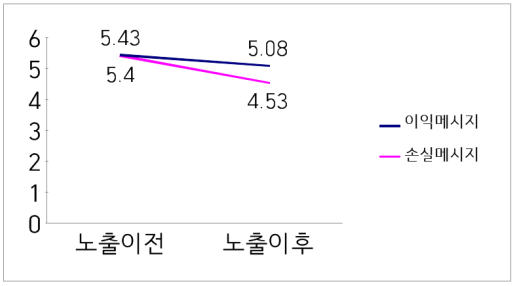


그림 1. 메시지 노출 이전과 이후의 메시지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

이어서 사전적으로 통일세에 반대하는 응답자 집단에서 메시지 유형(이익메시지, 손실메시지)에 따라 태도의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전제로서 구형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mauchly's W 값, 엡실런 값 중 Greenhouse-Geisser 수치 등이 모두 이상치인 1을 기록한 바 구형성 가정은 충족되었다. [표 11]은 이익메시지와 손실메시지 제공에 따른 사전 사후 태도의 평균값이다. 통일세에 반대 하는 응답자 가운데 이익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의 찬성정도 평균은 2.30으로 나타났으며, 메시지 노출이후 2.54로 증가(0.24)했다. 그리고 통일세에 반대하는 응답자 가운데 손실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의 찬성도 평균은 2.24로, 손실 메시지에 노출 이후 2.82로 증가(0.58)했다. 즉, 통일세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진 응답자들 역시 메시지 제공에 따라 일정 수준의 태도변화를 보였으며, 이익메시지 보다는 손실메시지가 더욱 큰 태도 변화를 유발했다. [표 12]에 구형성 가정에 제시된 값을 보면 노출전후와 메시지유형의 설명변량은 2.178, 오차변량은 .0450, F값은 4.836이고 유의확률 0.05보다 작아 메시지 노출 이전과 이후의 태도변화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노출 메시지 유형에 따라 태도 변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익메시지보다 손실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태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2]는 메시지 유형과 사전사후 찬반태도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손실에 보다 민감하다는 전망이론의 일반적 가정을 입증하는 것으로, 정책 입안자는 설득 전략의 수립 시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손실메시지) 유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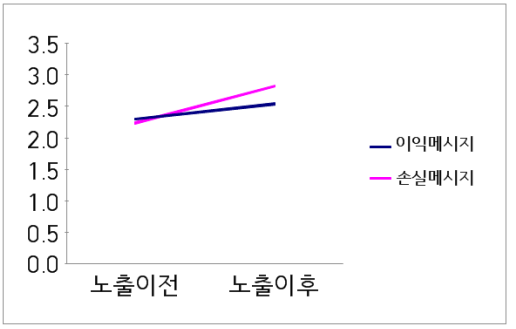


그림 2. 메시지 노출 이전과 이후의 메시지유형에 따른 태도 변화

표 11. 반대집단의 사전 · 사후 통일세 납부 의사 평균값

	이익·손실메시지	평균	표준편차	N
반대 (메시지노출이전)	이익	2.30	1.075	69
	손실	2.24	1.106	76
	합계	2.27	1.088	145
반대 (메시지노출이후)	이익	2.54	1.301	69
	손실	2.82	1.373	76
	합계	2.68	1.342	145

표 12. 유의도 검증 결과

	변량	자유도	F	유의확률	부분에타 제곱
노출전후*메시지	2.178	1	4.836	.029	.033
오차	.450	143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통일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의사를 파악하는 탐색적인 시도이다. 통일세 도입 논의가 아직까지 추상적인 의견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 등 외적 변수를 감안할 때 관련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직접 과세만이 유일한 통일 재원의 조성 방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향후 통일 비용의 구체적 조성단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 부과 방안이 논의될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관련 연구는 통일세의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통일재원 조성 방식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데 그쳤다. 최근 들어 통일세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나 태도를 파악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납세자가 아닌 대학생 표본을 사용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통일세에 대한 인지도나 납부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동태적인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반면, 본 연구는 사전적으로 통일세를 부담할 납세자들의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차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일세 이슈는 통일 관련 문제이자, 조세 문제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법론과 시행시기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정책 사안으로서 역동적인 여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세에 대한 기초적인 납세자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통일 및 세금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응답자의 선유경향, 응답자의 관련 지식수준이 찬반 의사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했다. 나아가 통일세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와 반대하는 응답자 집단에 각각 상이한 설득 메시지를 제공해 태도 변화의 정도를 측정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통일 및 통일세에 대한 사전 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결과,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는 성별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른 통일 지지도는 평균값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통일세 납부 의사, 곧 통일세에 대한 지지도에는 성별과 소득 수준, 연령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세금에 대한 민감도가 상이하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대학생 등 표본을 포함한 과거 연구 결과는 소득 수준이나 성별이 통일세 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혔으나[9],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결과, 성별이 통일비용 조성 방법과 조성 시기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3]. 특히 본 연구는 직접 과세 방식으로서 통일세 문제에 한정해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찬반 의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의미를 가진다.

둘째, 통일 및 조세제도, 통일세 등에 대한 지식수준이 통일 및 통일세에 대한 찬반 입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사안 인식이나 정치적 가치관이 통일세에 대한 찬반 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관적인 인지도 차원을 넘어서 관련 지식수준과 찬반 의견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탐색했다. 연구결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 및 통일세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과 관련된 정책의 인지도 제고 및 교육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도출의 선결 과제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 관련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세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는 조세 관련 지식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통일 재원의 확보가 통일 정책의 선결 조건이며,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통일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단에서 모두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 효과의 차이를 발견했다. 연구결과, 통일세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통일세의 효용성을 언급하되, '통일세의 부담이 작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통일세의 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메시지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통일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통일세의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일세의 (효과 대비) 이익이 매우 작다’라는 메시지 유형이 ‘통일세의 (효과 대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메시지 유형보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태도 변화에 수반되는 이익보다 손실의 크기에 보다 민감하다는 전망이론의 가정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결국 통일세에 대한 사람들의 기초적 인식과 태도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본 본 연구는 수용자의 판단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발견했다. 특히 관련 지식수준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득 메시지의 유형에 따른 동태적인 여론 변화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향후 통일 및 통일세 이슈에 있어 정책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획득해나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정책 내용을 공유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정책 캠페인에서 태도변화에 따른 손실메시지와 이익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 특성 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찬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성별이나 지식수준, 중요성 인식 등이 상호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응답자의 선유경향이나 지식수준 외에 매개 변수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연구는 ‘직접 과세 형식의 통일세’에 한정해 응답자들의 납부 의사를 파악했다. 실제로 다양한 통일 비용 조성 방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통일세에 있어서도 직접세외에 간접세 형식의 징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는 과세 형식에 대한 의사판단을 추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 등을 응답자에 포함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해 20대에서 50대까지 경제활동인구를 표본으로 삼았다. 조세 이슈의 특성상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보다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납세액이나 조세저항 정도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 납세액의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인의 측정이 임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가계 소득 수준 외에 납세액이나 종사 직군 등 경제적 변수를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보다 대규모의 재정 패널 자료 등을 활용해 통일세 납부 의사와 수용자의 복합적인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망이론의 일반적인 가정에 따라 손실을 강조하는 메시지와 이익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비교했다. 반면 최근 설득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망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수용자의 미래지향적 성향이나, 메시지의 확실성 정도 등을 설득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 효과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정책 이슈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기획됐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메시지 유형별 비교나 수용자의 미래지향성 등 변수를 포함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는 보다 다양한 메시지 유형간의 설득 효과를 비교 분석하길 바란다. 아울러 의견 변화의 정도가 다른 집단들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유형이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건강이나 안전 이슈와 같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사안과 달리, 정치적인 의사 판단에 있어서는 보다 역동적인 준거점 설정 효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메시지 제공 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집단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지지 정도가 변화하는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통일세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찬반 의사 전반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지적했다. 특히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 효과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실증적인 결과를 제안했다는 사실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연구를 계기로 통일 비용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이슈에서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김정수,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제안 배경과 향후 추진과제," 통일연구논총, 제19권, 제2호, pp.1-26, 통일연구원, 2010.

[2] 박종수,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pp.179-202, 2010.

[3] 심석무, 박현춘, "통일비용조성의 인지도가 통일세 도입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13권, 제1호, pp.157-176, 2013.

[4] 김우철, 신영효,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 pp.107-142, 2016.

[5] 박성진, 선은정, "통일세와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16권, 제4호, pp.139-166, 2011.

[6] 염명배, 유일호,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재정학연구, 제4권, 제2호, pp.183-221, 2011.

[7] 박현재, 조광희, "통일세의 도입과 왜곡된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pp.139-159, 2013.

[8] 정주신,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거론 배경과 그 함의," 서석사회과학논총, 제3집, 제2권, pp.135-158, 2010.

[9] 문준호, 민동호, 이치영, "KIPF 대학생 논문공모 수상작:통일세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조사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179권, pp.113-137, 2011.

[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1401031209043001

[11] G.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80.

[12] 최헌섭, "국가간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교육저널, 제28권, 제2호, pp.21-39, 2009.

[13] 박영석, 이지홍, "납세 태도, 공정 사회 인식 및 납세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7권, 제3호, pp.109-133, 2013.

[14] 임영규, 김진찬,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제22권, 제2호, pp.49-71, 2014.

[15] 여용범, 권광현, "부동산중개업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국제회계연구, 제18집, pp.109-126, 2007.

[16] 최임수, "대학생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12권, 제2호, pp.45-66, 2007.

[17] P. Slovic and E. Peters, *Risk Perception and Affec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SAGE Publications, 2006.

[18] D. Kahneman and A. Tversky,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pp.263-291, 1979.

[19] D. Kahneman and A. Tversky, "Choices, value and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제39권, 제4호, pp.341-350, 1984.

[20] D. Kahneman, J. L. Knetschm, and R. H. Thale, "Experimental tests of the endowment effect and the coas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 No.6, pp.1325-1348, 1990.

[21] 김은혜, 조수영, "메시지 프레이밍과 수용자의 미래지향적 성향이 건강메시지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 전망이론의 적용," 홍보학연구, 제17권, 제3호, pp.77-119, 2013.

[22] 김준홍, 윤영민,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메시지의 설득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IDS 질병영역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제14권, 제1호, pp.83-123, 2010.

[23] B. E. Meyerowitz and S. Chiken, "The effect of message framing on breast self-examination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2, No.3, pp.500-510, 1987.

[24] A. J. Rothman, R. D. Bartels, J. Wlaschin, and P. Salovey, "The Strategic Use of Gain and

Loss Framed Messages to Promote Healthy Behavior: How Theory Can Inform Practic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6, pp.202-220, 2006.

[25] 이세영, 박현순, "PR메시지 유형, 준거점 설정, 지각된 위험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2호, pp.70-95, 2009.

[26] 김광수, "광고에서의 프레이밍 효과 : 예상이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9권, 제4호, 1998년 겨울, pp.193-212,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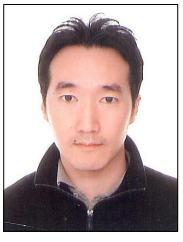
[27] 김종화, 유홍식, "인터넷 건강보도에서 획득·손실 프레임과 댓글이 이슈 지각과 예방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6권, 제3호, pp.176-217, 2012.

[28] 김효진, 김영욱,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위험 인식에서 메시지 프레이밍, 수용자의 전문성, 위험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방사선 위험을 중심으로 한 분석," 홍보학연구, 제17권, 제1호, pp.143-183, 2013.

[29] 성영신, *인지욕구와 메시지 주장의 유형에 따른 공익광고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저 자 소 개

김 해 영(Haeyoung Kim) 정회원



- 2006년 9월 : 고려대학교 언론학 석사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언론학과(박사수료)
- 2007년 ~ 2011년 : CJ헬로비전
- 2012년 ~ 2016년 8월 : 용인송담대학교, 오산대학교 강사

<관심분야> : 미디어정책, 문화이론, 정치 커뮤니케이션

신 명 환(Myoung-Hwan Shin)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석사)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언론학과(박사수료)
- 2012년 8월 ~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튜터, 서울지역 강사

<관심분야> : 뉴미디어, 저널리즘, 위험 커뮤니케이션